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법과 사회) 정답 및 해설**

<정답>

1. ② 2. ③ 3. ① 4. ⑤ 5. ② 6. ⑤ 7. ④ 8. ④ 9. ① 10. ③
11. ② 12. ① 13. ② 14. ④ 15. ③ 16. ② 17. ④ 18. ④ 19. ④ 20. ②

1. 사회규범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② (가)에서 아기가 태어났으니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에서 법 규범을 따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일이 많으므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법은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된다. 따라서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③ (나)에서 돌잔치는 아기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행해오던 관습이다. 관습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사회 규범은 법이다.
④ 법과 관습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한다.
⑤ 법과 관습은 모두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므로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2. 자연법과 실정법의 이해

정답 해설 : ㄴ. ⑦의 국가의 법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법으로서 실정법이다. ⑮의 영원한 자연의 법은 자연법이다.

ㄷ. 자연법은 자연의 질서 또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질서이다. 즉, 영원하고 보편타당한 성격을 갖는다. 이에 비해 실정법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인간이 제정한 법이므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정법을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 자연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오답 피하기

- ㄱ. 보편적 정의 관념은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정의로서 자연법에 가깝다.
ㄹ. 자연법은 영원하고 보편타당하므로 절대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실정법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므로 상대성과 특수성을 갖는다.

3. 국민 참여 재판의 이해

정답 해설 : ① 국민 참여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일정한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평결을 내린다. 만일 배심원들이 유죄평결을 내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누구든지 재판의 종류에 관계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국민 참여 재판은 일정한 유형(살인, 강도, 강간, 부패 범죄 등)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활용된다. 민사 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B가 범죄 사실을 자백했더라도 다른 증거가 있어야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 ⑤ A, B가 제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제2심과 제3심이 남아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4. 상소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 ㄷ. 1심 재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행해졌으므로 2심 재판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근. 형사 재판에서 항소 제기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민사 소송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오답피하기

- ㄱ.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다.
- ㄴ. 항소할 경우 항소장은 재판을 받은 법원에 제출한다. A는 1심 재판을 받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5. 국제법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국제 사회에서 오랫동안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규범이 국제 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된 것이므로 국제 관습법, (나)는 해당 국가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므로 조약이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오답피하기

- ① 국제 관습법은 공식적인 체결 절차가 없다. 비준권이 국가 원수에게 있는 것은 조약이다.
- ③ (가)는 국제 사회 전체에, (나)는 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게만 효력이 있다.
- ④ (가)는 국제 사회에서 널리 국제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적용될 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조약 중에서 헌법 제60조에서 정한 중요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 이외의 조약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 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법과 관련된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6. 지적 재산권의 이해

정답 해설 : ⑤ △○의 디자인이 ○○의 디자인을 변형했으므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의 디자인에 신규성과 창작성이 깃들어 있으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권리는 지적 재산권의 하나인 산업 재산권(디자인권)이다. 산업 재산권은 특정한 기술적 창작을 한 자가 이를 공개하는 대신, 국가는 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산업 재산권은 재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다.
- ②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산업 재산권은 그 물건을 만든 특정한 기술, 즉 정신적 산물이 권리의 객체이다.
- ④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7. 배분적 정의의 사례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매길 것을 주장하므로 배분적 정의를, 을은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강조하므로 평균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 ㄴ. 상습 범죄자는 일반 범죄자에 비해 죄질이 무거우므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배분적 정의의 사례이다.
- ㄹ.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의 사례이다.

오답피하기

- 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므로 평균적 정의의 사례이다.
- ㄷ.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평균적 정의의 사례이다.

8. 환경 분쟁의 구제 수단 이해

정답 해설 : ㄴ. 공장의 폐수가 방류되어 A시의 갑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환경 오염 분쟁 사건이다. 갑은 이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장 사업주를 상대로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ㄹ. 갑은 A시장이 위법하게 공장 설립을 승인했기 때문에 자신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므로 A시장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ㄱ. 행정 심판의 대상은 행정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어야 한다. 공장 사업주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행정 심판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ㄷ. 기관 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갑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아니므로 기관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9. 법의 적용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법의 적용 단계에서 사실의 확정, (나)는 관련 법규의 발견, (다)는 결론이다.

ㄱ. 사실의 확정은 입증, 추정, 간주의 방법이 있는데,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에 의해 사실 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ㄴ.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의 일반적인 내용이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범죄의 내용이다. 따라서 ⑤은 ⑦에 비해 제한적이고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⑦은 일반법, ⑤은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오답피하기

ㄷ. (가)는 사실의 확정이므로 소전제, (나)는 관련 법규의 발견이므로 대전제이다.

ㄹ. 갑은 일반인이 아니라 운전 중인 을을 폭행한 것이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이 적용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 청약 철회 사례의 분석

정답 해설 : ③ 갑은 집으로 찾아온 판매 사원을 통해 영어 교재를 구입했으므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인쇄 불량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만일 인쇄 불량을 입증한다면 제품의 하자와 관련된 철회 기간인 30일 이내(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혹은 3개월 이내(공급받은 날로부터)가 적용된다.

오답피하기

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반드시 이를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 소송에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갑은 민사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병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계약은 병 본인이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⑤ 직원 을의 불법 행위에 대해 B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병의 법정 대리인은 을뿐만 아니라 B회사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1. 형사 절차의 이해

정답 해설 : ㄱ.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에 본인에게는 영장을 제시하고,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또 그 가족에게는 체포의 이유와 일시, 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ㄷ. 구속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다.

오답피하기

- ㄴ. 구속 영장은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법관이 발부할 수 있다.
- ㄹ. 구속 영장 발부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달라는 제도가 구속적부심 청구이다. 이것은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의 주체가 아니다.

12. 물권의 종류 이해

정답 해설 : ① (가)는 채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점유 이전하지 않고 설정할 수 있다. 만일 약정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② 저당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권리이다. 손목시계나 목걸이는 동산이므로 질권의 대상이다.
- ③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용익 물권이다. 저당권은 담보 물권에 해당한다.
- ④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는 유치권이다.
- ⑤ 저당권은 그 물건을 담보로 삼고 있는 것이지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저당권의 설정 등기는 등기부 을구에 기재한다.

13. 임차권 사례의 분석

정답 해설 : ② 우선 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B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시기가 C은행이 저당권을 획득한 시기보다 빠르므로 경매에서 B가 1순위 권리자로서 C은행보다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았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 ① A는 아파트의 소유자이므로 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③ A와 B는 모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B는 우선 변제권을 여전히 갖고 있으므로 C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다.
- ④ B가 가진 임차권이 비록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가질 경우 권리의 설정 순서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는다. 여기서는 B의 우선 변제권이 C은행의 저당권보다 앞에 설정되었으므로 선순위로 채권을 변제받는다.
- ⑤ D는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B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14. 동시사망에 대한 상속 사례의 분석

정답 해설 : ㄴ. 갑과 A의 사망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므로 갑의 재산은 직계 비속인 B에게 상속된다.

ㄹ. 갑이 A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갑의 재산은 직계 비속인 A와 B에게 1:1로 상속된다. 이후 A가 사망하면 직계 존속인 을에게 상속된다.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지속된다. 따라서 을은 전 남편 갑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자녀 A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 ㄱ.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된다.
- ㄷ. A가 갑보다 먼저 사망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A의 재산은 직계 존속인 갑과 을에게 1:1의 비율로 상속된다. 이후 갑이 사망할 경우 갑의 재산은 직계 비속인 B에게 상속된다. 을은 이미 이혼했으므로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15.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의 이해

정답 해설 : ③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 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할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에 직접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재판과는 관련이 없이 제기할 수 있다.
- ②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은 헌법 재판소에 직접 청구한다.
- ④ 위헌 법률 심판의 청해는 법원이 한다.
- 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16. 황견 계약의 이해

정답 해설 : ② ㉠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 계약이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황견 계약으로서 위법이다. ㉡은 위법인 황견 계약을 이유로 한 해고이므로 무효이다.

오답피하기

- ① ㉠과 ㉡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지 않다.
- ③ 근로 계약이 무효이므로 그 계약을 이유로 한 해고 역시 무효이다.
- ④ 황견 계약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치므로 무효이다.
- ⑤ 근로 계약은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개별 기업에 의한 부당 해고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7. 가족과 친족의 범위 이해

정답 해설 : ④ 배우자의 할머니는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

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 혈족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 ① 고모부는 혈족인 고모(3촌)의 배우자이므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
- ②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다. 4촌 이내의 인척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이모는 혈족인 어머니의 자매이므로 역시 혈족이다. 따라서 ㉠과 ㉡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배우자의 고모는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방계 혈족으로서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8.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④ (가)는 임신한 아내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부정한 의도로 공격하는 A를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는 개가 달려와 물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걷어차 상처를 입힌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은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이다.

오답피하기

- ① A가 부정한 의도에서 행한 공격에 갑이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의 사례이다.
- ② 을의 행위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 피난의 사례이다.
- ③ (다)는 자신이 강탈당한 지갑을 되찾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 ⑤ 자구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19. 근로의 권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④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오답피하기

- 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가에 대해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②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극적·방어적 권리로 행사될 수 있다.
- ③ 두 권리는 모두 국가 권력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
- ⑤ 두 권리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인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를 지향한다.

20.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 ㄱ. 개발 제한 구역은 적법하게 지정된 것이므로 갑은 국가에 대해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상 손실 보상은 특정인의 희생으로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킬 경우에 발생한다.

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갑은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ㄴ.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행정상 손해 배상 청구의 요건이다.
- 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는 행정상 손해 배상 청구의 요건이다.